

문지마 '야권단일화'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변혁적 대중운동 복원과 반자본-대안세계화운동 강화로!



1% 대 99%

전 세계가 'Occupy!(점거하라)' 시위로 뜨겁다. 자본주의 체제의 탐욕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분노의 가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개 나라, 1,00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막대한 부를 금융자본과 대재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시켰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급증, 실질소득의 감소와 빈곤의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도저히 대다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어진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없이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삶의 나락으로 빠트리며 긴축과 궁핍만을 강요하고 있다. 부를 움켜쥔 1%의 지배계급에 나머지 99%의 다수자가 저항과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행동이 "우린 노예가 아니다, 사람이다", "분노하라", "자본독재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야권단일화만이 살길?

자본주의 체제의 고통과 그에 대한 투쟁은 한국 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 현대를 필두로 한 30대 재벌의 순익은 사상 최

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빈민, 자영업자 등 다수 대중들의 생활수준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5.1배로 미국보다 심하다.

(30대 재벌 순익)

| 연도 | 2008 | 2009 | 2010 |
|----|------|------|------|
| 액수 | 33조원 | 46조원 | 79조원 |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저 제주도 강정마을부터 부산 영도, 각 지역과 서울의 장기투쟁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민중들의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데 노동 대중을 대표한다는 운동·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대중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2012년 총선·대선을 핑계로 '문지마 야권단일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에 반대하면 다 같은 편'이라는 무원칙한 반MB야권연대 논리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부터 올해 4·27 재보선에 이어 10·26 재보선에서도 어김없이 채택되었다. 노동 대중이 아래로부터 스스로의 힘과 의제로 조직화하고 투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갈아엎어서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세력화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노동운동, 대중운동은 배제되고 정당이 상층에서 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하

고 노동 대중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견 아니다 싶은 활동가들도 일단 야권단일화 틀이 작동하면 그 속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분출하기 힘들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수렁에서 벗어나자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의 이념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민주당과의 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 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야5당'의 연설은 대중들로 하여금 운동의 지향을 헷갈리게 한다.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내내 생겼던 열사들, 구속되고 투옥된 동지들, 양산된 비정규노동자들, 한미FTA에 관한 책임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반MB를 위해 이제는 무조건 손을 잡으라고 하니 이 무슨 우경화에 기여 상실증이란 말인가.

둘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폭을 협소하게 만든다. 야권단일화라는 미명하에 노동 대중이 영똥한 이들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노무현정권에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이나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진압했던 한명숙을 서울시당 후보로 지지했고, 반면 진보정당 후보로 나선 노회찬

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야권단일화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정작 노동자 민중을 대표해야 할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지층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득표에 그쳤다. 무릇 자기 이념과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투쟁력을 키워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위상도 높아지고 그 힘으로 제도정치에 대한 강제력도 커질 텐 데 미리부터 접고 들어가기니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왜 민주노동당이 지난 십 수년 간 노동운동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을 해 온 '정신적인 민주당원' 박원순 후보에 대해 전 조직적 지지선언을 하고 정치후원금을 모으고 투표운동을 하는데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정치 대신에 야권연대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셋째,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대중투쟁, 대중운동을 선거정치에 더욱 종속시켜 약화시킨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개정,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장투사업장 승리, 수많은 현장의 노동탄압 문제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더욱 투쟁력을 모으고 문제제기를 확산시켜야 하는데 선거로 쏠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민주당은 안 되지만 박원순은 괜찮다?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일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더라면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서지 못했겠지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점점과 개입 여지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민주당 후보는 안 되지만 박원순 후보는 괜찮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박원순 후보 지지 방침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력해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신자유주의 반대' 노선과 불일치한다. 이것은 박원순 후보가 대표하는 시민운동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은 '재벌개혁 운동 하던 사람이 재벌에게 돈 받고, 낙천낙선 운동 하던 사람이 검증 회피한다'고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온갖 부패비리로 얼룩진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당적이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의 반론대로 '똥물 뒤집어 쓴 사람이 재 물은 사람 나무란다'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단순히 후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던 시민운동의 노선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운동, 금융자유화 옹호론

1997년 IMF 구제금융과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휘말려 들어갔다.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조치는 금융자유화, 재벌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정리해고로 드러났다. 이 중 재벌개혁이란, 재벌의 문어발식 중복투자를 주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이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경제위기 재벌책임론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의 강력한 기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은 금융자유화 흐름을 저지하거나 비판하는 운동이 아니라 철저히 그 과정에 기여하는 운동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소액주주운동이 공유한 재벌개혁론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집행과 감독기능의 분화 △주주권리의 보장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소액주주운동이 모태로 삼은 미국의 주주행동주의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타이거펀드나 템플턴그룹과 같은 초국적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벌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소액주주운동과 초국적자본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의 수혜자는 노동자와 민중이 아니라 자본과 주식소유자로 철저히 국한된다. 신자유주의적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국부유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지한 주주행동주의와 금융자유화는 오늘날 세계 금융위기의 배경을 이룬다.

기부 운동, 기업의 '아름다운 세탁'

재벌개혁 운동과 함께 박원순 후보가 주력했던 것이 바로 2000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이었다. 낙천낙선 운동의 결과, 총선 국면의 쟁점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심판에서 낙천낙선 대상으로 꼽힌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심판으로 변경되었다. 반민중적 구조조정을 일삼던 정부 여당은 발빠르게 낙천낙선 운동을 지지하면서 자신을 개혁세력으로 포장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총선 후에도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으로 다시 자리매김되었다.

박원순 후보가 재벌개혁과 낙천낙선 운동 이후 시도한 것은 기부 운동이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불리기도 하는 이 운동은 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 관념에 호소한다. 후자의 표현대로,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비영리조직(NPO)들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아름답게 세탁'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맥락에서 기업과 비영리조직은 전략적 상생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기업이나 부유층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 투기를 통해 얻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두고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기업은 무노조 경영과 불공정 거래로 유명한 삼성전자와 포스코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노동 착취나 노조 탄압을 눈감아주는 술책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증거다. 박원순 후보가 포스코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박원순 후보

현재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다수 시민'의 대표자로 자신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이는 기성 정당이나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운동이라는 표상을 통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시민운동은 사실상 정부 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적-행정적 NGO로 변모했다. 재벌개혁 운동, 낙천낙선 운동, 기부 운동에 이르기까지 박원순 후보의 이력은 결코 '신자유주의 반대'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기비판이 없다면 박 후보가 말하는 개혁과 복지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가 최근 TV 토론에서 한미 FTA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얼버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대한 박원순 후보의 상대적 진보성 또는 개혁 이미지를 이유로 그를 마냥 지지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상층부에서는 기층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핑계로 더 시민단체나 자유주의 정당과의 연대에 기대고 이것이 다시 기층운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대중투쟁복원,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 강화로

노동자 민중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야권단일화의 종착역은 내년 대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운동진영

일각에서 '민주연립정부'를 말하며 대선에서 민주당 등과 연합하여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적 정권교체'로 볼 수 없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진보정당 출신이 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경제위기 속에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민주당 정권 유지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투쟁을 억압해야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키우고 강화해야 전 세계적인 저항 흐름에 발맞추어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혁적 대중운동을 복원하고 투쟁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운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이 지배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제일 빠른 길이다. 2011년 아랍 지역의 민중혁명,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의 노동자 총파업과 일련의 대중 저항, 미

국에서 시작되어 퍼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물결에서 보듯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당연히 전제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 투쟁과 괴리되는 정치, 운동과 괴리되는 선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야권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원칙이다. 이러한 흐름이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의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는 제2의 정치세력화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방향」보고서 비판

지난 8월 민주노총 중집수련회에서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방향'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보집권'이라는 시대인식에 따라, 첫째,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을 통해 강화된 당의 힘으로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고, 둘째, 당의 노동중심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당원 가입('문턱없는 당비 납부제 도입', '현장당원 활동체계 구축') 및 지도체계 참여를 강화하고 정권교체기금으로 100억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정당 지원체계 구축이 제2의 정치세력화인가?

우리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제2의 정치세력화(안)을 대단히 우려스

럽게 본다.

첫째, 보고서는 '수권정당'의 운동에 맞게 산별노조운동을 개조하자는 역발상의 제안을 한다. 임금, 고용 문제는 기업단위에 맡기고, 사회적 임금이라 명명된 정당의 '복지'의제 실현을 위해서 산별노조가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임금과 고용투쟁이 기업단위노조에만 맡겨져 임금·고용방어도 실패하고 임금격차 축소에도 실패했다는 기간의 평가를 부정한다. 이는 총연맹과 산별노조운동이 연대임금, 연대고용 투쟁을 통해 노동자단결을 확대해야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노동자 당원 증가가 곧 노동자 정치?

둘째, 보고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반을 노동자 당원으로 채우면 노동중심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이 대중참여형으로 바뀌는 마당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운동을 전개해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당원의 양적 확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립정부구상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현재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체성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즉,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강화해나가기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고서에는 정치세력화 운동 재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정당 운동의 우경화는 묻어둔 채, 노동자 당원의 수적 증가가 곧 노동자정치라는 기계적 논리를 담고 있을 뿐이다.

제2의 정치세력화 방안, 완전히 재론되어야

이처럼 이번 보고서가 산별운동에 대한 기존 평가를 부정하는 논리로 가득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추진위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보다는 신자유주의자들과의 정치연합에 의존해 노동조합 운동의 새 출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기반 및 실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 정치인지를 외면한 채, 힘있는 정당에 대한 의존과 당원의 수적 배기라는 방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방책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노동조합 내 실리주의적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제2 정치세력화 방안은 완전히 재론되어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정치적 자주성, 시험대에 오르다

범야권 단일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3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17일에는 박원순 후보 지지를 위해 노동희망특위를 결성했다(상임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현재 노동희망특위는 '10만 노동희망 지킴이, 30만 노동가족 조직화 운동'과 '희망의 씨앗 5억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투표 참여 운동 등을 전개 중이다. 각 산별연맹들은 박원순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진보신당을 탈당한 정치인들까지, 진보정당의 인사들이 박원순 후보 지원세에 참여하고 있다.

야권단일후보가 노동운동 지지후보로 둔갑

그러나 노동운동 진영이 결합한 선거캠프에서 만들어준 선거공약들 외에 본인이 직접 노동자운동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후보의 이력에서 찾기 힘들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기간에 그 정권과 친

화적인 시민운동에 투신했던 것이 최근의 주된 경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 관계에 있는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류했다. 즉 지지율이 미약한 진보정당 후보가 야권단일화 틀에 갇히는 순간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이 아닌 후보를 결과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 몬 것이다.

요구와 경로의 괴리

민주노총은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에 결합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박원순 후보가 '진보개혁진영'의 후보이니 자연스럽게 친노동자 정책을 펼칠 것이라서 지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은 서울시 전역(각 자치구별로) 노동상담을 진행하는 '노동복지센터' 설치, 노-정간 안정적인 협의기구 구성,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오세훈 시장의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 복지,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 이전 반대 등 현안과 사회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는 해당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사활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를 받아줄 것으로 보이는 당선 가능한 야당후보를 지지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향후 노정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의지 이외에 얼마나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노동운동의 대중적 힘과 투쟁력이 될 것이다. 시장 당선을 위해 노력했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걸 내놓을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조직하여 이를 조합원 대중의 단결과 물리력으로 제기하여 관철하는 것인데 현재 선거국면에서는 지지운동 외에 다른 방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리허설

내년 대통령 선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지 모른다. 야권단일 대선후보 경선에 진보정당 후보가 참여하고, 자유주의 보수야당 인사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말이다. 아마 1년 후에는 민주노총의 간부, 조합원들은 (한때 한나라당 의원이던) 손학규, 혹은 노무현을 계승하는 모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 과연 민주노조 운동이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야 하는가? 민주연합론, 야

권단일화론으로 스스로를 몰아가 노동자운동의 독자적 위상마저 하락시켜야 하나?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시험대에 올라

노조가 요구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한 착취체제의 연장을 도모하는 보수야당과 연합하는 것이라면, 민주노조 운동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물어야한다. 민주노조 운동이 '공동정부'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들과 나누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절박한 해고자 복지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해당 노조가 요구를 제기하고 관여하는 것까지 부정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 운동 진영 전체가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나설 때라면 훨씬 신중해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이 본질적으로는 자본가를 지지하는 보수정당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버리는 것은 타당한가? 박원순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에서 노조운동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한걸음 내딛고 있는 중이다. 다음 한 걸음도 보수야당과 함께 하는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앞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활동가, 조합원들에게 달려있다.

박원순 후보는 왜 한미 FTA에 침묵하는가?

한미FTA폐기를 최우선 투쟁과제로



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FTA관련 입장을 숨길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유치한 학력논란이나 아파트 월세 논란, 1억짜리 피부관리숍 같은 네거티브 선거쟁점들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쟁점들의 이면 어딘가에 심오한 계급전쟁의 참뜻이 숨어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한미FTA날치기가 목전에 있는 마당에,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정치역량을 한미FTA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위력적 투쟁을 펼치자

당장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다음주 10월28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기간 중에 FTA 비준안을 처리할 작정이다. 원조 FTA당인 민주당은 말로는 FTA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지만, 그들이 원내에서 FTA를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유일한 희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벌여서, 한나라당이 감히 FTA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정세를 만드는 방법뿐이다. 국회본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0월 27일 오후에 국회에 집결하여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10월 28일 2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로 집결하자. 대한문앞 농성장을 기본거점으로 다음주 28일 국민대회 때까지 투쟁대오를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해내야 한다. 국회 본회의의 FTA법안이 비준된 후에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비준안을 본회의에 감히 상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중투쟁을 만들어 가자!

한미FTA 반대 입장을 숨기는 선거운동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당장 10월 중에 FTA 국회비준안을 처리하지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선본은 한미FTA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월 20일 TV토론회에 출연한 박원순후보는 한미FTA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끝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경원후보가 그런 박후보를 물고 늘어지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다른 모든 일들을 제치고 온힘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한미FTA 반대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FTA농성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속내를 밝혔다. 그가 말하길, “민주당은 ‘MB정권의 한미FTA’를 반대한다. 하지만 온몸을 던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대선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다.” 야권연대로 얻을 수 있는 표는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4~5% 수준의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해서 정권만 잡는다면, 한미FTA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온몸으로 반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무엇을 위한 야권연대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승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미FTA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진정한 민중 총력 투쟁으로!

한미FTA는 수출관세를 낮추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삶과 한국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구조조정 해버릴 수 있는 괴물협정이다. 이런 FTA를 눈감아주고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생각은 기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현실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FTA가 통과된다면, 설령 어떤 진보적인 지도자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후에 재벌과 미국자본에 맞서서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여론이라면, 그것을 바꾸어내기 위

1%부자들만을 위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집중)
일시: 10월28일 오후2시 장소: 여의도 국회앞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회앞 노숙농성 (수도권 집중)
일시: 10월27일 오후5시부터 장소: 여의도 국회앞

나, 대한민국의 시민은 한미에프티에이를 결사반대한다!